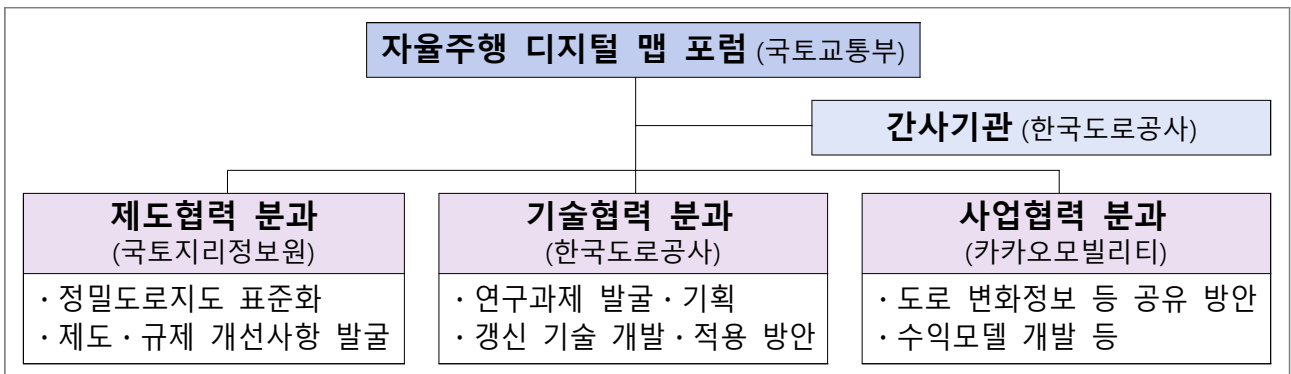


배포 일시	2022. 9. 20.(화)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진호 (044-201-3847)
	첨단자동차과	담당자	사무관 박미희 (044-201-4081)
보도일시	2022년 9월 2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0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「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」 20일 발족 - 자율주행 민관 협력 실시간 정밀도로지도 활성화 위한 협력의 장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20일(화)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축 및 갱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「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」을 발족하였다.
- 본 포럼은 전자지도 제작, 자율주행 기술 관련 산·학·연·관을 아우르는 총 52개 기관\*이 참여하는 논의체로서 제도협력, 기술협력, 사업협력 등 3개 분과로 구성·운영될 예정이다.

\* 공공기관(6개), 민간기업(39개), 연구원(2개), 학계(2개), 협회·재단법인(3개)



-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\*를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구축('21년 기준 20,653km)하고, 기존 구축구간 중 달라진 부분은 연 단위로 갱신하여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,

\* 차선, 표지,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는 정밀도로지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정보 등을 인식

-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변경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는 제도\*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최신의 정밀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.

\*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22조: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으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도로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함

- 하지만,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많아지면서 변화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고, 갱신 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,

- 특히, 정밀도로지도 관련 업계가 변화정보 수집을 위해 각 회사별로 인력 및 장비를 별도로 투입하고 있어,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어 왔다.

- 이번에 발족하는 「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」은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축 및 갱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포럼은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전체회의와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분과 회의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,

- 각 분과 회의에서는 민관이 수집해야 하는 도로 변화정보의 종류와 형식, 해당 데이터의 수집·관리·배포, 사업용 차량 등을 활용한 신속한 지도갱신,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사업 모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
- 향후 본 포럼을 통해 정밀도로지도 갱신 체계가 개선되면 민관이 중복으로 투입해 왔던 비용이 절감되고, 정밀도로지도 갱신 주기가 단축되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도입시기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현재는 도로의 변화정보를 민간과 정부가 각각 별도로 반영·갱신하고 있으나, 향후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통합된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

- 현행 MMS\*에 의존한 변화정보 탐지체계가 사업·개인용 차량의 탐지정보까지 확대되어 연 단위의 갱신주기도 대폭 단축\*\*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\* MMS(Mobile Mapping System): 차량 등에 위성항법장치(GNSS), 라이다, 카메라 등의 센서들을 탑재하여, 도로 노면 및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취득하는 장비

\*\* 갱신주기 단축 일정:(현행) 연 단위 → ('23) 1달 이내 → ('30) 실시간

**< 정밀도로지도 갱신체계 변화상 >**

구 분	현 재	중·단기	장 기
갱신 주기	연 단위	변화탐지 후 2주 ~ 1달	실시간
갱신 주체	민관 각각 별도	민관 협력	민관 협력
갱신 방식	 <MMS 장착 차량 탐지정보 활용>	 <사업용 차량 탐지정보 활용>	 <개인용 차량 탐지정보 활용>

-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“정밀도로지도의 효율적인 갱신과 관리에는 많은 정보·시간·비용이 필요한 만큼,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, 산업 생태계 발전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